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본격화'

### '전북의 친구' 문재인정부, 도민 열망에 응답 속도감있는 새만금개발 추진에 공항은 필수불가결 안정적 국가예산 확보에 기본·실시설계 가능해져

전북도가 50여년 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계획 적정성을 인정 받으면서 빠르면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014년 민선 6기 도백(道伯)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 추진된 전북권 공항건설 사업은 1988년 전주시 송천동 군비행장에 경기 김포와 제주 노선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50여년 만에 재개된 지역 최대 현안의 결실이다.

전북권 공항건설 사업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됐지만 무산된 김제시 백산면 김제공항을 빼드릴 수 없다.

당시 김제공항은 공사계약 및 착수단계에서 '항공수요와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단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30대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에 반영돼 전북권 공항건설의 희망이 보였으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끝나고 표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취임이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캠프대회(이하 '월드 스카우트')를 계기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민심을 반영할 경우 9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그동안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며 공항건설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는 송 지사가 취임한 해인 2014년 11월,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년), 국토교통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2016년)을 반영하거나 성사시키며 '도민들의 오랜 꿈'에 다가가기로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특히 송 지사와 가까우며 '전북의 친구'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당시 도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2025년 기본수요가 67만4000명, 새만금 유발 수요를 반영할 경우 9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그동안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며 공항건설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 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신청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예타 조사가 면제돼 빠른 개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북도의회, 14개 시·군 단체장, 기초의회까지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면제)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이어 기획재정부 27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 '차세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까지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송하진 도지사를 포함한 전북도 지휘부의 역량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도는 정부가 사업적정성을 인정하면서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해졌고, 내년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에 앞서 첫 단추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가장 큰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결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Tr-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 선점하는 등 전북지역 산업의 생산·부가 가치 효과 유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의 마무리 단계"라며 "정부가 사업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게 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활주로에 오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손잡은 여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유성열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여야 4+1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송성환 의장,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제안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송 의장은 최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 개발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5년간 전북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예산 규모는 확대됐다"며 "그러나 소상공

인 실태조사 결과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28.0%에 그쳤고, 지원정책과 전달체계 인지도 역시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은 현장과 밀착한 맞춤형 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정책 전달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의 기능을 집중·연계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상공인민을 대상으로 운영되

는 지원조직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유일하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해서 생존·성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환경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대응방안에 관한 특강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치, 경제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성 기자

## 靑 "한·아세안 관계 주변 4강 수준으로... 신남방정책 2.0 추진"

청와대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평화·외교 분야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 궤도에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보좌관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기대 수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의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과 한국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주 보좌관은 "과거와 달리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다양하고 풍성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FTA 네트워크 확대 등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인적·문화 교류 확대, 평화·안보 분야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주 보좌관은 "앞으로 이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

### 文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소회 밝혀 "서로 존중·협력하면 경제·문화 영역 경계 없어져 수평선 너머 아세안, 국민에게 더 가깝게 인식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지난 3박 4일간 부산에서 진행됐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공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것과 관련해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아세안의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보여준 배려와 의지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더 따뜻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함께해줘서 감사하다"며 "모쪼록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토를 넓힐 수 없지만, 삶과 생각의 영역은 얼마

든지 넓힐 수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연계하고, 협력한다면 경제와 문화의 영역 또한 경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평선 너머 아세안이 이번 두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나라들은 젊고 역동적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그럼에도 이 나라들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한발 한발 성장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경험이 아세안에게 매력적인 이유"라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까지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의 나라들은 조화를 중시하며 포용적"이라며

"양극화와 기후환경, 국제적 분쟁 등이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찍부터 아세안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생을 미덕으로 삼는 '아시아의 정신'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지혜로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오래된 꿈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양쪽의 장점을 흡수하고 연결하는 것"이라며 "아세안 10개 나라들과 우정을 쌓으며 우리는 더 많은 바닷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부산에서부터 육로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이 남았다. 어려운 고비와 갖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교량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을 서로 이어주며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부산이 그 출발지다. 국민들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